

SDI 정책리포트

미래지향적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전략

2009. 9. 7 제46호

이혜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적극적인 평생교육 추진의 필요성
- II. 서울시 평생교육의 현주소
- III.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전략

요 약

21세기 교육의 키워드는 평생교육이다. 이미 평생교육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평생교육 예산으로 2003년 기준 전체 교육비 대비 29.14%를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예산이 2009년 3,803억원으로 전체 교육비 예산의 0.9%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평생교육 추진정책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책무 신규 부과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의 추진주체로서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할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었고, 특정대상의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만 있을 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추진 경험이 적어 추진주체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 추진주체로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네트워크 미비로 인한 연계 부족

서울시는 현재 평생교육추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서울시 평생교육 조례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 법·제도적 지원체제를 구비하여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순수 평생교육 예산은 9억 9천만원에 불과하고 자치구 평생교육 예산도 10억원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많지 않으며, 송파구와 은평구간은 38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평생교육 시설 또한 유관시설이 대부분으로 평생학습관이 없는 자치구가 많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기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하여 연계성이 부족한 형편이며, 평생교육종합정보망도 구축되지 않아 시민의 평생교육에의 접근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시설 제공 프로그램의 67%가 교양·문화 프로그램으로, 직업관련 프로그램이 적어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 추진주체로서의 입지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

책임주체로서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평생교육 추진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조기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등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서울시 평생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가동시킨다. 셋째, 자치구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재정과 시설을 지원한다.

I. 적극적인 평생교육 추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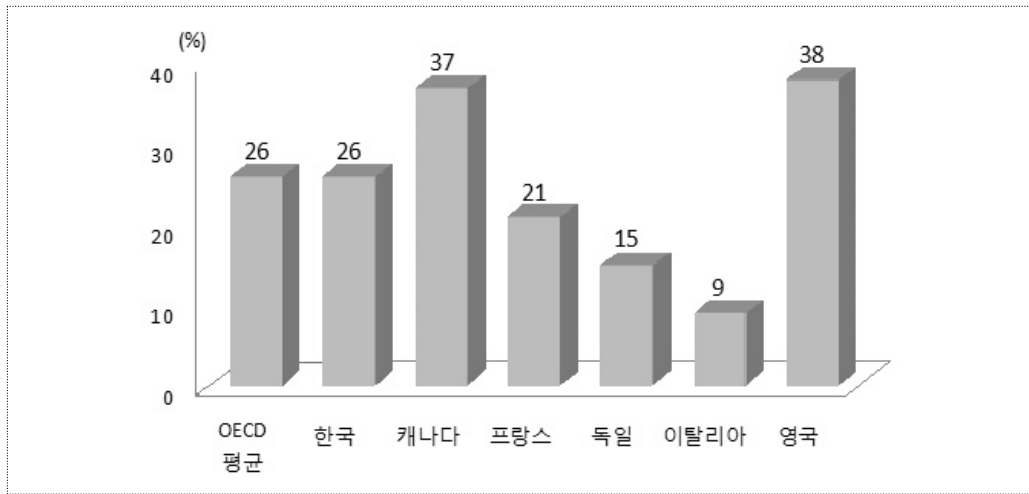
21세기 교육의 키워드는 평생교육

- 세계는 이미 평생교육 시대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이 세계적 추세
 - 일찍이 세계 주요 기구들은 평생교육이 21세기의 화두가 될 것을 천명
 - UNESCO의 21세기 교육위원회는 1996년 ‘함께 살아가는 학습(learning to live with), 앎의 학습(learning to know), 행함의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을 교육의 기초로 제안하고, 21세기 교육의 방향으로 평생교육을 제시

UNESCO의 21세기 교육위원회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일의 성격에 있어서 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계속적 과정을 형성해야 한다. 즉, 그들의 지식과 적성뿐만 아니라 비판적 재능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며, 그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OECD 역시 ‘만인을 위한 만인의 교육’을 21세기 평생교육의 전략으로 정립
 - 1996년 “모든 사람에게 평생학습은 필수적이며, 모든 사람은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
-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 관건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주요 선진국은 국민이 평생교육 및 학습에 참여하도록 국가적으로 지원
 - 주요 선진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영국 38%, 캐나다 37%로 OECD 국가의 평균참여율 26%를 상회



주 : 평생교육 참여율은 형식·비형식 교육의 참여율을 합산한 값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7,2008), 「2008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에서 일부 수정.

[그림 1] 주요국의 평생교육 참여율

- 평생교육 예산이 영국은 2003년 교육비 대비 29.14%, 미국은 성인 및 문자 해독 교육 지원 예산으로 2002년 교육부 예산의 10.51%를 지출

<표 1> 영국의 교육예산 대 평생교육 예산(20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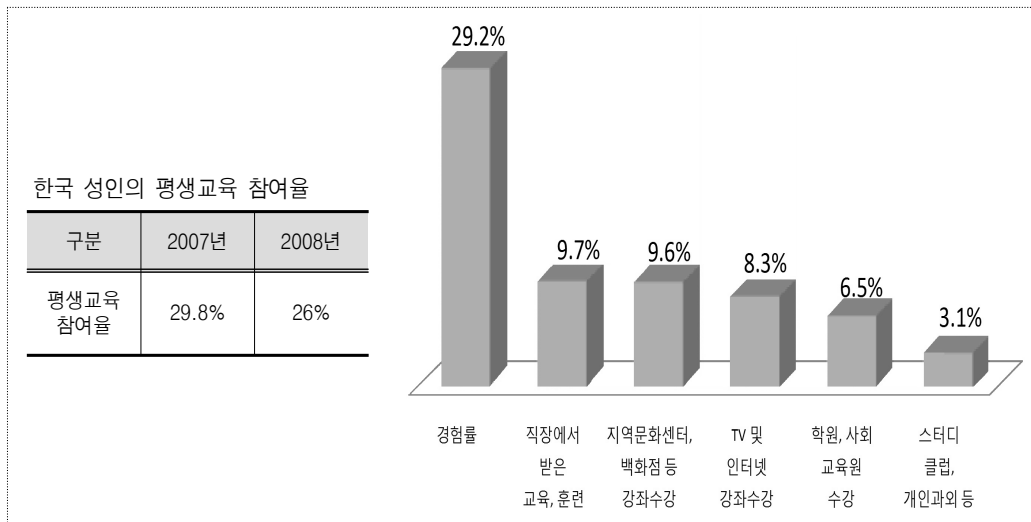
(단위: 백만 파운드, %)

	2000~01	2001~02	2002~03	2003~04
평생교육비	4,171	5,964	6,565	7,107
교육비 총계	16,416	19,307	23,146	25,393
교육비 대비 평생교육비 구성비	25.41	30.89	28.36	29.1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주요국보다 낮으며, 평생교육 예산은 현저히 저조
-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8년 OECD 평균인 26%에 해당되나, 2007년보다는 3.8%p나 하락

-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8년 29.2%로, 세 명 중 한 명이 평생교육에 참여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예산은 2009년 3,803억원으로 전체 교육비 예산 41조 5,810억원의 0.9%에 불과



출처: ① 한국교육개발원(2007,2008), 「2007-200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② 서울특별시(2009), 「2008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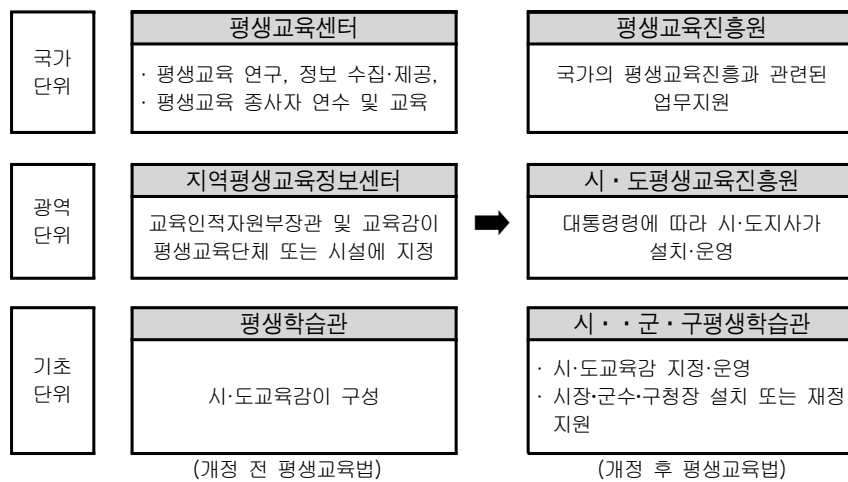
[그림 2] 평생교육 참여율과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경험률

광역자치단체에 새로이 평생교육 책무 부여

- 평생교육법 전면개정(2007.12)으로 서울시에 평생교육진흥 책무를 신규 부과
 - 과거 교육감 소관이었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서울시장에 부여
 -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진흥할 책무 신설로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할 명실상부한 기회 부여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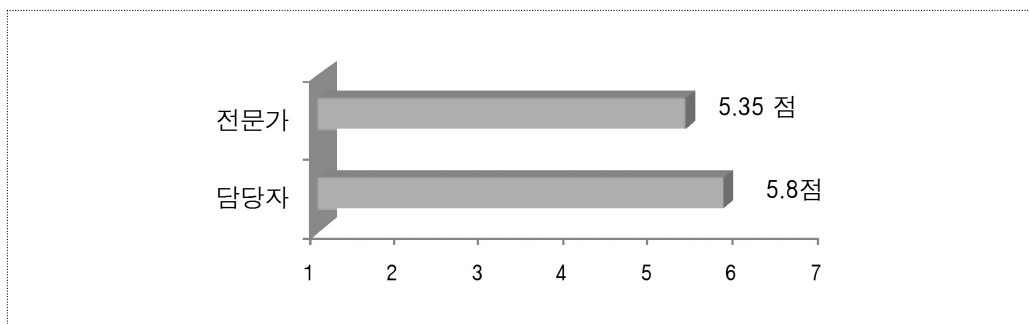
- 첫째,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전담 추진기구의 정비
 평생교육센터(중앙)-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광역)-평생학습관(시·군·구) → 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변경·조정
- 둘째, 평생교육 협의기구를 중앙, 광역, 기초단위에 각각 마련
 국가 단위에는 교육과학부 장관 소속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광역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평생교육 협의회, 기초에는 시·군·구의 장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진흥 조항을 강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른 추진기구의 변화>

- 서울시는 평생교육의 추진주체이나 아직은 역량이 미흡
 -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온 평생교육 추진 틀로 인해 서울시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역량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
 - 또한 그동안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운영
 - 특정 대상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사업은 추진하였으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 경험이 부족

- 서울시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평생교육 추진이 필요한 시점
 - 인력의 지속적 개발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폭
 - 평생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부서별 추진으로 체계적 추진에 한계
 - 조사결과,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평생교육 과제로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적 추진' 이 7점 척도에서 전문가 5.35점, 서울시 업무담당자 5.8점으로 체계적인 통합추진이 필요함을 인식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그림 3]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추진 필요성 설문결과

- 평생교육 시대에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의 67%가 평생교육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II. 서울시 평생교육의 현주소

아직은 평생교육 추진의 초석 마련 중

- 추진 조직과 제도적 지원 장치를 갖춰 본격적으로 평생교육 추진에 시동
 - 서울시 본청의 과 수준의 전담조직(평생교육담당관)과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채용으로 평생교육 추진을 도모
 - 2009년 3월 현재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전담팀 구성
 - 평생교육사는 현재 11개 자치구에서 15명으로, 아직 자치구의 44%만 채용
 - 서울시 및 23개 자치구가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18개 자치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법·제도적 지원체제를 정비
- 전 시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지원과 평생교육 시설
 - 순수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지원사업예산의 1.26%인 9억 7천만원에 불과

<표 2>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예산(2009년)

(단위: 억원)

구분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시설개선분야	학습 프로그램	우수인재 양성	자치구인 센터브 사업	계
예산	9.7	60	86.9	35.3	277	264	37	10	769.9

출처: 서울시 경영기획실(2009), "교육지원사업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대다수 자치구도 관련 예산이 10억원을 상회하지 못하며,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큰 실정

- 송파구는 13억 9천만원으로 은평구의 3천 6백만원의 38배
- 평생교육 시설의 자치구간 격차도 크며, 대부분의 관련 시설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만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

<표 3>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관련 시설 현황

구분	평생학습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관	공공체육시설	여성회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계	
											소계	총계
강남구	13	14	5	96	9	4	4	17	3	1	16(22)	188
강동구	1	5	1	0	5	3	0	5	1	1	22(17)	39
강북구	0	3	0	0	6	3	0	1	1	1	15(13)	28
강서구	0	5	1	0	13	5	1	1	2	1	29(20)	49
관악구	2	3	2	1	5	5	2	1	1	1	23(21)	44
광진구	1	3	0	0	4	4	1	2	1	1	17(15)	32
구로구	1	5	1	0	6	3	1	5	1	1	24(15)	39
금천구	0	3	0	0	4	2	1	0	1	1	12(10)	22
노원구	1	3	0	0	11	4	1	3	1	1	15(21)	48
도봉구	0	1	1	0	8	2	1	2	4	1	20(14)	34
동대문구	0	2	1	0	3	4	2	2	1	1	16(22)	38
등작구	0	3	1	0	10	3	1	1	3	2	24(15)	39
마포구	1	4	0	0	4	1	0	1	1	1	13(16)	29
서대문구	0	2	2	0	6	1	1	1	2	1	16(14)	30
서초구	0	1	3	0	5	4	1	0	0	1	15(18)	33
성동구	0	4	0	0	4	3	0	1	1	1	14(17)	31
성북구	1	1	5	1	8	3	1	2	1	1	24(20)	44
송파구	1	4	1	2	9	1	1	2	2	1	34(26)	50
양천구	1	2	2	0	7	6	1	2	1	1	23(18)	41
영등포구	1	2	0	0	3	1	0	0	3	1	11(18)	29
용산구	0	2	2	1	3	1	1	0	1	1	12(16)	28
은평구	0	2	0	0	9	2	0	1	1	1	16(16)	32
종로구	0	7	35	11	3	1	0	2	0	1	60(19)	79
중구	0	1	9	1	3	35	1	4	1	1	56(15)	71
중랑구	0	5	0	0	10	2	0	0	2	1	24(16)	38
전체	24	120	72	113	158	99	22	56	36	26	701(434)	1,135

주: () 는 주민자치센터 수

강남구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을 변경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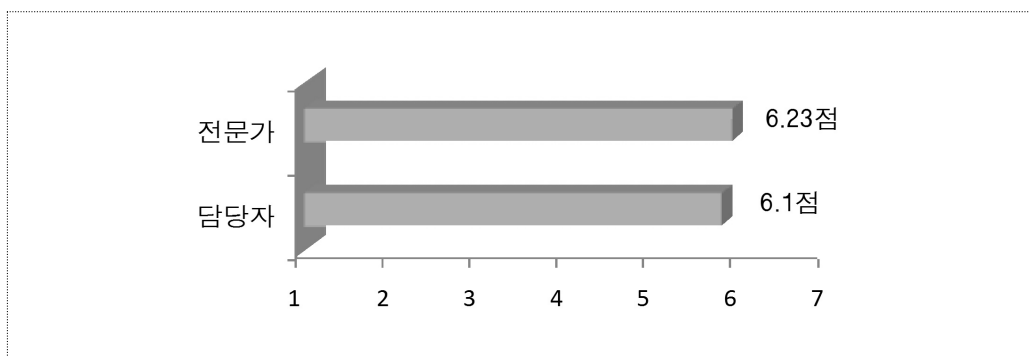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부족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미비로 연계 운영에 한계

- 서울시 관련 부서간, 서울시-자치구, 서울시-관련 기관,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가 미흡
- 일부 자치구는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의 활성화를 지원
- 중앙부처간 연계 부족, 부서간 권한 차이, 계획단계부터의 연계 부족, 담당자의 잦은 이동 등의 다양한 저해 요인이 존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도 연계가 안 되는데, 행정안전부도 안되고 노동부 예산에 직업교육이 얼마나 많이 잡혀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 예산을 갖다 못써요. 안돼요. 안 돼. 그게 정부차원에서 안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인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2009년 4월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업무담당자 면담).

- 7점 척도 조사 결과 전문가 6.23점, 업무담당자 6.1점으로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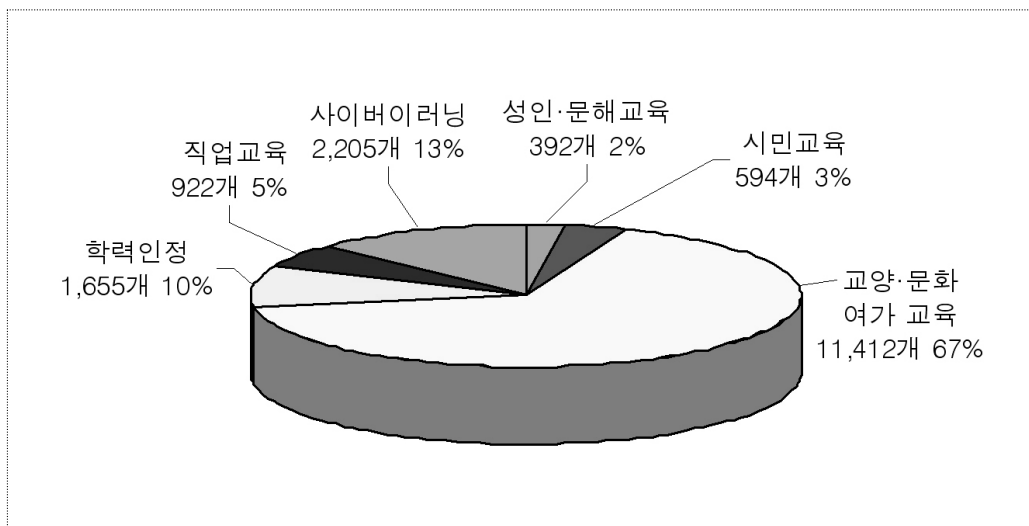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그림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설문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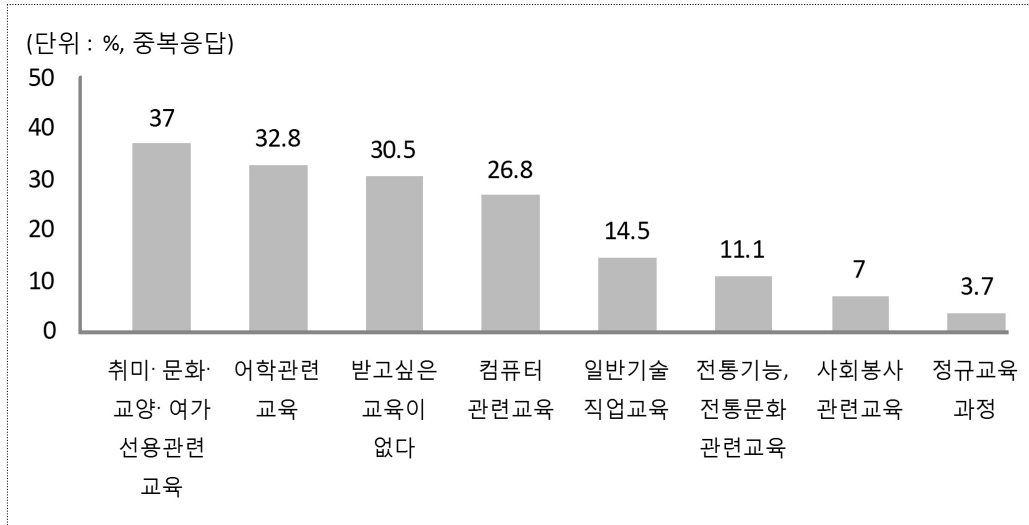
- 교양·문화 프로그램이 대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미약
 - 평생교육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2/3 이상이 교양·문화·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25개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7,177개로, 이중 교양·문화·여가 프로그램이 67%인 11,412개인 반면,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5%인 922개에 불과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방안 연구」.

[그림 5] 자치구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서울시민도 교양·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며,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적어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에 한계
- 서울시민의 37%가 교양·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수강을 희망



출처: 서울특별시(2009), 「2008 서울서베이」.

[그림 6] 평생교육 희망 교육과정

소외 계층의 평생교육 참여가 저조

□ 평생교육 참여에도 저소득층, 저학력층 등은 소외

- 공공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저소득층의 수강이 저조하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맞춤형의 프로그램조차도 저소득층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
 - 시간과 비용 등을 저소득층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자격증 프로그램을 넣은 이유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격증이 소득이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결국 답습이 되다보니까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육받을만한 시간이 없어요 (2009년 4월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업무담당자 면담).

- 2005년의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 저학력일수록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저조
 - 200만원 이하는 400만원 이상보다 참여 경험이 약 1/3 정도 수준

- 대졸 이상 41.8%, 고졸 22.8%, 중졸 이하 18.7%로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 경험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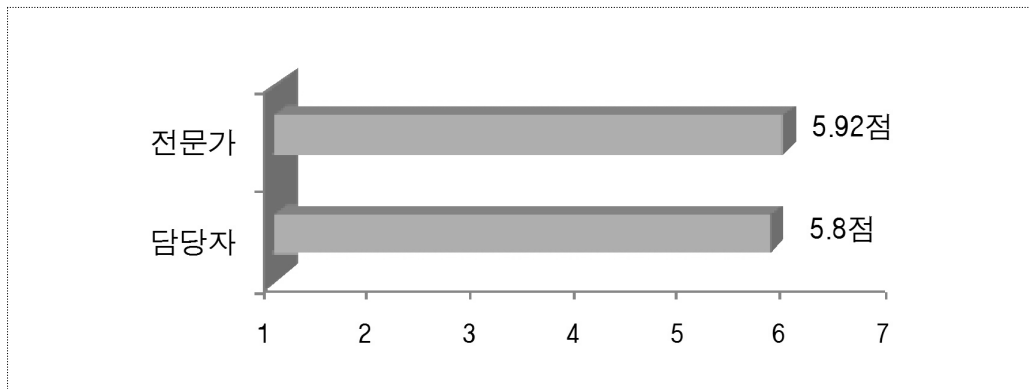
<표 4> 평생교육 참여 경험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참여 경험	12.9%	26.2%	34.6%	35.4%
비경험	87.1%	73.8%	65.4%	64.6%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 연구」에서 재작성

- 소외 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

- 조사 결과, 전문가는 5.92점, 업무담당자는 5.8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방안 연구」.

[그림 7]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지원 강화에 대한 설문결과

III.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전략

미래지향적 주민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체제로 전환

- 평생교육 추진주체로서의 서울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
 -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 추진주체의 입지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
 -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에 따라 부과된 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전 시민의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을 보장
 -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 추진방안 마련
 - 취미·여가·교양을 위한 평생교육을 넘어서 취업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을 실현할 필요
- 서울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효과를 극대화
 - 지역자원을 연결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와 시설 접근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의 지원체제를 구축
- 시민의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자치구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공정한 평생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자치구간 시설 및 재정 격차 해소 방안 필요
 - 자치구가 주민 요구에 부합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시설 등의 지원 필요

□ 주요 추진전략

주요 정책	추진전략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가동
자치구 평생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 해소 지원 • 자치구 특화 사업 유도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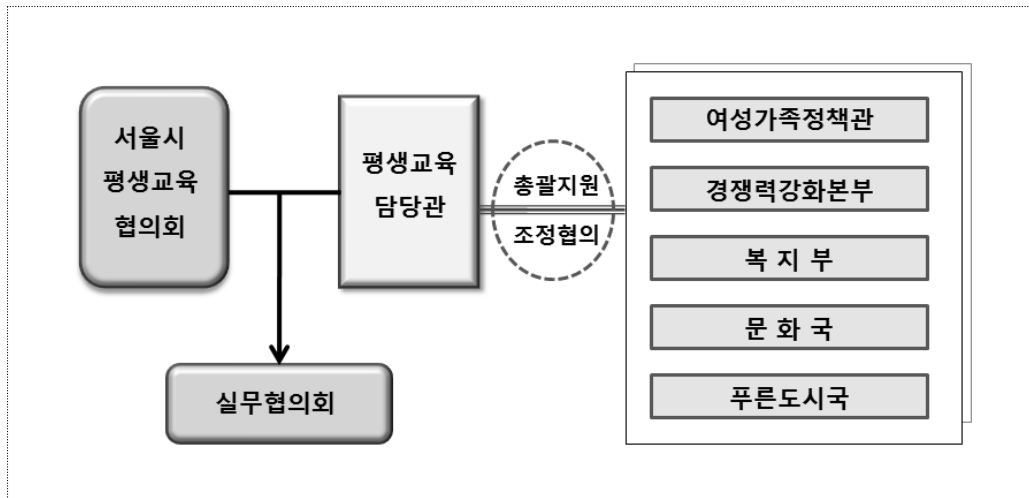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 평생교육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

-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평생교육 지원 전담조직으로 기능 강화

<단기안>

- 평생교육담당관을 평생교육 업무 총괄·조정 부서로 기능을 강화
 - 타 부서(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등)에서 추진되는 평생교육 성격의 업무 중 이관 가능한 업무 이관
 - 유관 업무는 평생교육담당관이 총괄하여 부서간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효과 저하 방지
- 현재의 평생교육협의회 외에 실무 수준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실질적 조정 협의 기반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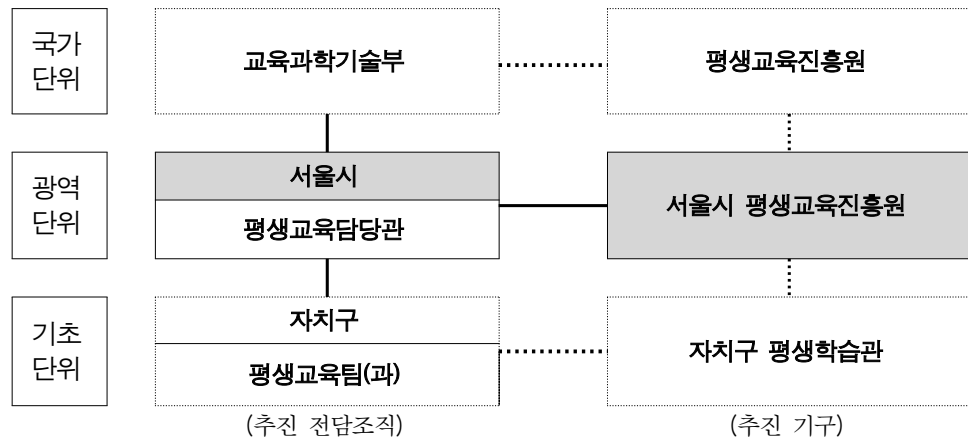


[그림 8] 평생교육담당관의 총괄 기능

<장기안>

- 평생교육담당관을 평생교육국으로 승격하여 평생교육 업무와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통합을 추진
 - 광역 단위에서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추진으로,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추진체계 마련할 필요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 평생교육의 효율적 진흥을 위한 추진기구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 조기에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
 - '평생교육진흥원-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자치구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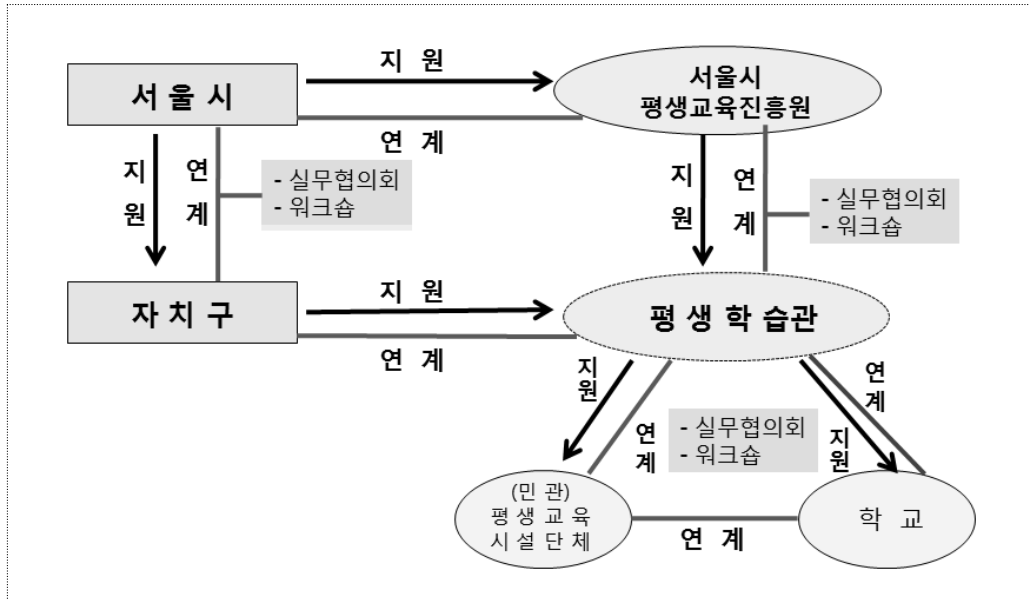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발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정책개발 및 조사, 교육 및 연수, 평가 및 컨설팅의 기능을 수행



[그림 9] 평생교육 지원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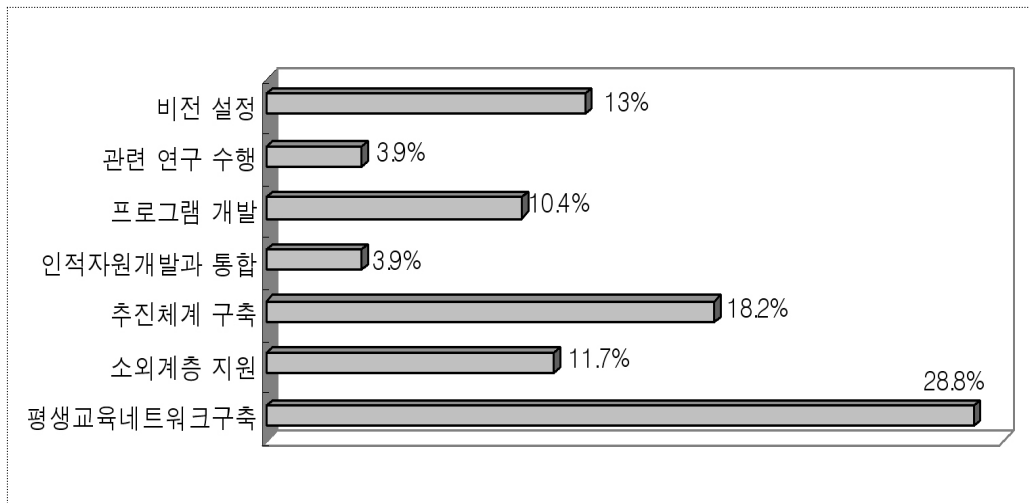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 기관, 평생교육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평생교육 추진
 -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서울시(자치구)-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간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
 - 서울시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네트워킹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
 -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무협의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자치구 평생학습관은 실무협의회와 워크숍을 운영하여 네트워킹을 활성화



[그림 10]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도

-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서울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로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28.8%로 1순위 응답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그림 11]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함부르크시 네트워크 체제

- 함부르크시는 계속 교육기관, 해당 지역 공공기관, 학교, 고용주체, 상공회의소 등 직업연합, 협회, 기업 등 23개의 협력체가 '교육과 학습문화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라는 협력체제를 구비하여, 지역 내 협력으로 모든 협의체가 상호이익을 추구
- 또한 협의체가 제공하는 교육상담과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화를 부여하며, 정보를 통한 전문성의 인정과 여러 학습장소의 연계로,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만들게 되는 등의 효과 발생
- 무엇보다 지역내 협력을 통한 공동 인식과 상호신뢰로 지역 네트워크를 넘어서 학습문화를 형성하는 효과 발생



출처: 변종임(2006),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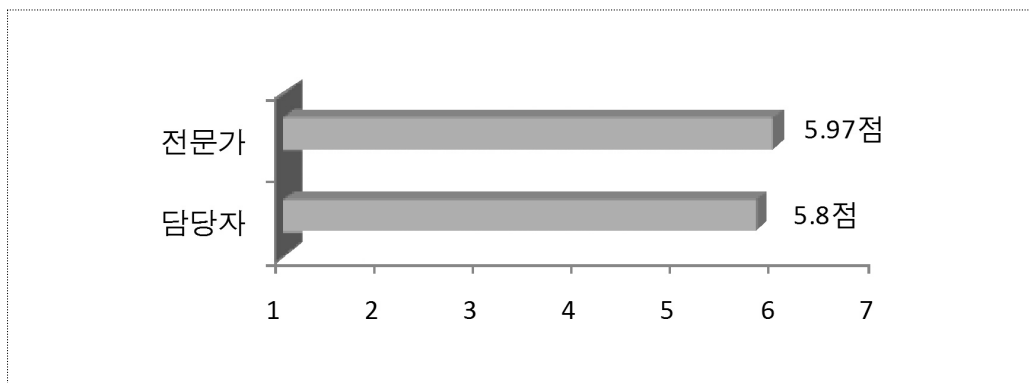
□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 정보망 구축·가동

- 시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
-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 프로그램, 강사 정보를 제공
- 시와 시민 간 소통의 통로가 되도록 정보 인프라 구축

자치구 평생교육 지원

□ 자치구간 평생교육에서의 재정과 시설 격차를 해소할 필요

- 자치구간 평생교육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접 지원 필요
- 조사 결과에서, 전문가는 5.97점, 업무담당자는 5.8점으로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그림 12] 자치구간 재정 격차 지원

- 자치구간 평생교육시설의 격차를 보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지원
- 1자치구 1평생학습관으로, 생활 밀착형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건립비의 일부 지원이 필요

□ 자치구 특화 사업 유도 및 지원

-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특성을 잘 부각시킨 자치구 특화 사업이 필요
- 서울시는 평생교육 사업의 일괄 사업을 지양하고, 자치구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이혜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65
lhsook1@sdi.re.kr